

“2026년 국가 대도약 출발점…국민 체감 성과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8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코스피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히 지방,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들이 성장의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정 성과의 기준으로는 ‘국민 체감’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이는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 참모진을 향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완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가의 성장이 국민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 대전환 필요해”

“지방·중소벤처·청년 등 새 성장 축 되도록 정책 역량 집중할 것”

발표 시 구체적인 변화상과 시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다”며 인재 확보와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문인광주 북구청장이 돌연 이를 철회하면서 ‘3선 재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청장 출마를 준비해 온 임지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광주 북구청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8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늦은 오후 북구를 통해 의회에 사임 의사 철회 통지를 전달했다.

해당 통지에는 ‘자치단체장 사임 사전 통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앞서 의회에 제출했던 사임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의회에 ‘2026년 1월 8일 자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시점보다 한 달 앞서 사임한 뒤 자연인 신분으로 선거를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광주·전남 시도 통합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문 구청장은 전날

‘사임 철회’ 문인 광주 북구청장, 3선 도전으로 방향 트나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 북구청장 선거 예측불허

사임서 철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시도 통합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임서 철회에 따라 당초 이날 열린 예정이던 문 구청장의 퇴임식 일정과 관련한 행 인수인계서 작성도 취소됐다. 문 구청장은 현재 청사에서 간부회의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사임서 철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이를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사직할 수 있고, 사직이 완료되면 권위가 발생해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직의 법률관계는 사직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확정되는데, 문 구청장의 경우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사직으로 불여지가 있어 효력 발생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지자들은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를 두고 책임을 거론하며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달성 북구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퇴 철회는 주민을 설득한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시험한 선택처럼 보인다”며 “문 구청장은 광주시장 출마를 전제로 사퇴를 공언했고, 북구 주민과 행정은 그 전제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사임 철회 이유로 ‘시도 통합’을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최우선 과제였다면 애초에 개인의 정치적 진로 설정을 이유로 북구 행정을 정치적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은 선택부터 설명돼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예

정이다. 또 다른 임지자 A씨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구청장이 낸 입장문을 보면 사임은 연기된 것”이라며 문 구청장과의 맞대결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뜻을 내비쳤다.

의회 내부에서도 문 구청장의 사임과 철회를 둘러싸고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때 관련 사안을 놓고 상임위원장단 회의 개최가 거론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문 구청장의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 북구의원은 “의회에 대한 일방적 사임 통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철회 과정에서는 적어도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는 소명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나아가 사임 철회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전남 통합 없이는 지역의 생존도 미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1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 김성 수석부위원장, 양부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호남발전특위(광주·전남)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이 2월 중 조기에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나머지 세부 사항은 단서조항을 두어 단계

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권한과 재정 측면에서 분명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면서 통합된 광주·전남에 중앙정부의 권한 대폭 이양 및 지방 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율 인상, 기업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R&D 세액공제 확대, 투자 인센티브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초광역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닌 분산되어 있던 권한과 재정, 정책 역량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김영록 “행정통합하더라도 지방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광주와 전남 간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6·3 지방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시·도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 추진 계획, 향후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현재 상황에서 (6·3지방선거)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그는 “현행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로 1명씩 선출하게 돼 있다”며 “최근 전남교육감이 행정통합에 찬성하며 광주교육감에게 교육통합을 제안

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는 통합지체에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동등한 주체로 격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도보다는 특별시로 명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로 잠정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회·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명칭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5개 시·군·5개 시·17개군 기존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행정통합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7개 시·군·구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남 기자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진도아리랑물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